

최근 경제위기 이후의 재정학 연구동향*

김 상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1. 머리말

경기상승과 하강으로 이루어지는 경기순환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비록 양태를 달리하기는 하지만 모든 시대와 국가에 공통적인 현상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닌 듯하다. 이미 우리는 경기순환이라는 현상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또 하나의 경기상승 또는 하강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별다른 주목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특정한 경기 국면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곤 한다. 특정한 경기 국면이 특정 시기에 많은 사람들의 우려 대상이 되는 것은 경기하강이 대규모이면서도 급속히 전개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1920년대 말에 발생한 대공황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된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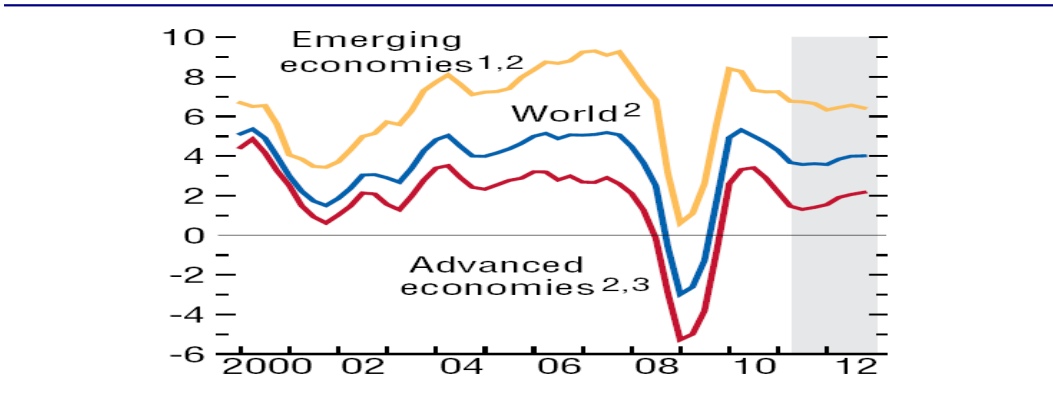
최근에도 급속하고도 대규모인 경기하강이 발생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에서 촉발된 경제위기가 전 세계 국가들로 번지게 되었다.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률 저하와 실업률 상승을 초래한 경제위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다음 그림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전 세계 국가들의 GDP 성장률을 분기별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전세계의 GDP 성장률은 2007년 3분기부터 뚜렷한 하강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에는 음의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기침체현상은 선진국(advanced economies)이나 개발도상국(emerging and developing economies)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단지,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 비하여 음의 성장정도가 다소 약할 뿐, 전체적인 양상은 공통적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속하

* 본 원고는 2011년도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개최된 워크숍(2011. 11. 10(목), 한국은행 소공별관 13층 대회의실), 「글로벌 경제위기와 경제학의 새로운 연구 동향」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는 국가들은 경제위기 이전에는 평균적으로 5%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하였으나,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4분기에는 -6% 성장이라는 놀랄 정도의 경기침체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전세계의 GDP 성장률(2005~2010)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September, 2011.

참고: 2011, 2012년은 전망치임.

2007년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는 1900년대 후반에 몇몇 국가들이 경험하였던 외환위기와는 성격을 달리 하고 있다. 무엇보다, 1920년대의 경제 대공황에 비교할 만큼 전 세계적인 위기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외환위기는 특정 몇몇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전개된 반면, 현재의 경제 위기는 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모든 국가가 공통으로 경험하고 있다. 둘째, 외환위기와는 달리 경제회복이 단기간 내에 쉽사리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점이다. 외환위기 시에는 국가의 대응에 따라 위기를 단시일 안에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하였다. 불행히도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위기는 단시일 안에 쉽게 극복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경제위기의 특징이 어찌 되었건, 극심한 성장저하와 실업률 상승에 직면한 각 국가는 자신들이 맞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응책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유효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부의 재정정책이다. 물론 위기가 금융부분에서 파생된 것인 만큼, 금융부분의 내실화를 위한 구조조정 정책이나 규제도 정부가 취해야 할 최우선 정책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금융부분의 위기가 시발이 되어 초래된 경제위기를 완화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는 재정정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유효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재정정책의 대표적 예로는 감세, 다양한 분야의 지출확대 그리고 이들을 조합한 패키지(package) 등을 들 수 있다. 경제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이 선택한 재정정책의 종류는 상이하며, 정도에서도 차이가 크다. IMF가 2008년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될 성장촉진 패키지의 크기는 미국이 GDP의 4.8%에 이르는 반면 이탈리아는 0.3%, 인도는 0.5%에 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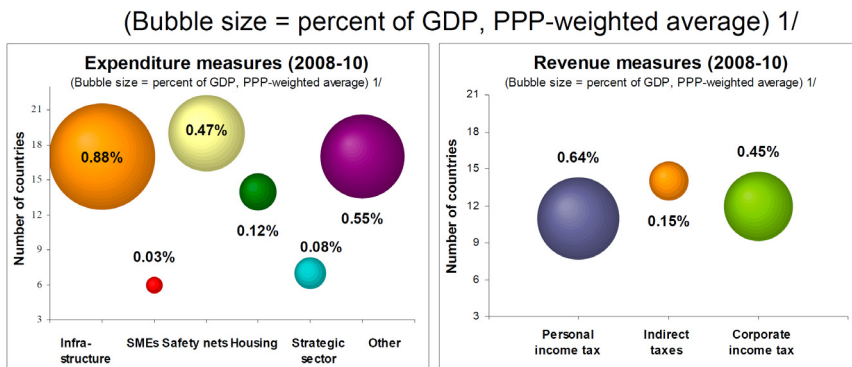
이와 같이, 경기침체가 대규모이면서도 급속도로 발생할 때에는 재정정책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흔히 사용된다. 그런데 사회가 위기 대응책으로 재정정책을 원용하게 되면 재정학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재정정책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공황 시대가 케인즈의 이론을 탄생시킨 것이 가장 대표적이라 하겠다. 두 번째는 경기침체라는 현상 자체가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그것이 대규모이면서도 급속도로 전개되는 것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사회적 현상이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비단 경기침체만은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최근 경기침체 이후 재정학 연구분야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다음 절에서는 경제위기의 현상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정책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제 3절에서는 재정학 분야에서 최근 경기침체를 전후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제 4절에서는 관심을 끝마친 몇몇 연구에 대해 보다 상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마지막 절은 요약과 중심으로 본고를 매듭짓고자 한다.

2. 경제위기와 각국의 재정정책¹⁾

아래 표는 G-20 국가들이 경기부양을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부양책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출에서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사회안전망이 잇고 있다. 한편, 수입에 있어서는 개인소득세 감면과 법인세 감면을 통한 경기부양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2〉 G-20 국가들의 경기부양책의 구성



Source: IMF staff estimates.
1/ PPP weights include all countries.

1) 이 절의 내용은 김상현(2009)에서 발췌한 것임.

1) 각국이 선택한 재정정책의 종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 국가들은 재정정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측면에서 각 국가가 취하고 있는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앞의 그림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G-20에 포함된 국가들이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택하고 있는 재정정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보자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G-20 국가들의 경기부양책(2008-10) 1/

| | A r g e n t i n a | A u s t r a l i a | B r a z i l | C a n a d a | C h i n a | F r a n c e | G e r m a n y | I n d i a | I n d o n e s i a | I t a l y | J a p a n | K o r e a | M e x i c o | R u s s i a | S a u d i A r a b i a | S o u t h A f r i c a | S p a i n | T u r k e y | U K | U S | |
|---------------------------------------|---|---|----------------------------|----------------------------|-----------------------|----------------------------|---------------------------------|-----------------------|---|-----------------------|-----------------------|-----------------------|----------------------------|----------------------------|---|---|-----------------------|----------------------------|--------|--------|---|
| Measure | | | | | | | | | | | | | | | | | | | | | |
| Expenditure | | | | | | | | | | | | | | | | | | | | | |
| Infrastructure investment | T | T | | T | T | T | T | T | T | T | T | T | T | | T | T | T | | S | T | |
| Support to SMEs and/or farmers | | | | T | | | T | | | | T | T | | T | | | | T | | | |
| Safety nets | T | T | T | T | T | T | P | T | T | T | T | T | T | T | | T | T | T | T | T | |
| Housing/construction support | | | T | T | T | T | P | T | | T | T | T | | T | | T | T | | T | | |
| Strategic industries support | | | | | T | T | | T | | T | | | | T | | | T | T | | | |
| Increase in public wage bill | | | | | | | | | | | | | | | | | | | | | |
| Other | | T | T | T | T | T | T | T | T | T | T | T | T | T | | | | T | T | T | T |
| Revenue | | | | | | | | | | | | | | | | | | | | | |
| CIT/ depreciation/incentives 2/ | | | T | P | P | | P | | P | P | P | P | | P | | | | P | | P | |
| PIT/ exemptions/deductions 3/ | | P | | T | P | | T | P | | P | T | P | P | P | | | | P | P | P | P |
| Indirect tax reductions/exemptions 4/ | | P | | T | | P | P | P | T | P | T | | T | | | | | S | T | S | |
| Other | | | T | | | | | | | | P | P | T | | | | | | P | P | |

Sources: Country authorities; and IMF staff estimates.

Note: T = temporary measures (with explicit sunset provisions or time-bound spending); S = self-reversing measures (measures whose costs are recouped by compensatory measures in future years); and P = permanent measures (with recurrent fiscal costs).

1/ Measures announced through early May 2009.

2/ Some of the corporate income tax (CIT) reductions in Germany, Italy, and Korea are temporary.

표에서 알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재정지출의 경우 일시적인 지출상승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조세지출의 경우에는 항구적인 조세삭감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많다는 점이다. 또한, 재정지출에서 거의 모든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사회안전망에 대한 지출이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출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그 다음에는 주택이나 건설에 대한 지원과 전략산

업에 대한 지원이 수적으로 우세하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임금을 증가시켜 경기부양 효과를 꾀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세지출에서는 개인소득세에 대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사용하는 국가의 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법인세와 간접세 경감이 비슷한 수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항구적인 감세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별로 고찰하여 보면, 가장 많은 수의 재정정책을 채택한 국가들로는 독일, 이탈리아, 대한민국, 일본, 캐나다, 터키 등이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나 남아프리카 그리고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수적인 면에서 영구적인 재정정책보다 일시적인 정책에 상대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는 국가로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한민국을 들 수 있다. 반면, 독일이나 아르헨티나, 터키 등의 국가들은 영구적인 정책에 상대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다.

2) 각 국가의 성장촉진 정책의 크기

각국이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선택한 재정정책 패키지(package)의 크기는 국가마다 상이한데, 구체적인 크기는 다음 표에서 보는 것과 같다. G-20 국가 중 GDP 대비 비중으로 계산할 때 가장 큰 규모를 보이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GDP의 총 9.2%에 해당하는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를 채택할 계획이다. 그 다음으로는 7.4%에 이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고, 그 뒤를 중국(6.2%)과 대한민국(6.0%)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5.8%)가 잇고 있다. 이에 비해, 가장 적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로는 이탈리아(0.3%), 브라질(1.1%), 터키(1.1%), 아르헨티나(1.5%), 프랑스(1.5%), 멕시코(1.5%) 등을 들 수 있다. 전체 20개 국가들의 평균은 4.1%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세계 국가들이 채택한 재정정책의 규모는 각 국가마다 매우 상이하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총합계를 기준으로 할 때, 최저 0.3%에서 최고 9.2%까지 GDP 대비 재정정책의 규모는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은 이와 같이 각 국가가 채택한 재정정책의 규모를 결정짓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각 국가가 가진 요인들 중 무엇이 재정정책의 규모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해 IMF(2009, 2)는 두 종류의 요인들을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다.²⁾ 첫 번째는 경기부양에 대한 요구의 차이이고 두 번째는 재정여력(fiscal space)의 차이이다. 경기부양에 대한 요구의 차이에 해당되는 보다 구체적인 변수로는 자동안정화 기능의 크기, 재정적 지원이 없을 경우 각 국가가 겪게 되는 생산차(output gap)의 크기, 각 국가의 승수효과의 차 등을 들고 있

2) The Size of the Fiscal Expansion: An Analysis for the Largest Countries, IMF, February, 2009.

다. 한편, 두 번째 부류에 해당되는 구체적 요인들로는 재정적자, 정부부채,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y), 이자율 등을 열거하고 있다.

〈표 2〉 G-20 국가들의 경기부양책 비용(GDP 대비)^{1), 2)}

| | 2008 | 2009 | 2010 | 합계 |
|---------------------------------|------|------|------|-----|
| Argentina | 0 | 1.5 | ... | 1.5 |
| Australia | 1.2 | 2.5 | 2.1 | 5.8 |
| Brazil | 0 | 0.6 | 0.5 | 1.1 |
| Canada | 0 | 1.9 | 1.7 | 3.6 |
| China | 0.4 | 3.1 | 2.7 | 6.2 |
| France | 0 | 0.7 | 0.8 | 1.5 |
| Germany | 0 | 1.6 | 2 | 3.6 |
| India 3/ 4/ | 0.6 | 0.6 | 0.6 | 1.8 |
| Indonesia | 0 | 1.4 | 0.6 | 2.0 |
| Italy | 0 | 0.2 | 0.1 | 0.3 |
| Japan 5/ | 0.3 | 2.4 | 1.8 | 4.5 |
| Korea | 1.1 | 3.7 | 1.2 | 6.0 |
| Mexico | 0 | 1.5 | ... | 1.5 |
| Russia | 0 | 4.1 | 1.3 | 5.4 |
| Saudi Arabia | 2.4 | 3.3 | 3.5 | 9.2 |
| South Africa 3/ 6/ | 2.3 | 3 | 2.1 | 7.4 |
| Spain 7/ | 1.9 | 2.3 | ... | 4.2 |
| Turkey 8/ | 0 | 0.8 | 0.3 | 1.1 |
| United Kingdom | 0.2 | 1.5 | 0 | 1.7 |
| United States 9/ | 1.1 | 2 | 1.8 | 4.9 |
| Total (PPP-weighted average) | 0.6 | 2 | 1.5 | 4.1 |

Source: IMF staff estimates.

Note: 1) Figures reflect the budgetary cost of crisis-related discretionary measures in each year compared to 2007 (baseline), based on measures announced through mid-May 2009. They do not include (i) “below-the-line” operations that involve acquisition of assets (including financial sector support) or (ii) measures that were already planned for. Some figures represent staff’s preliminary analysis.

2) “...” is used for countries for which no information is available on the size of their fiscal pack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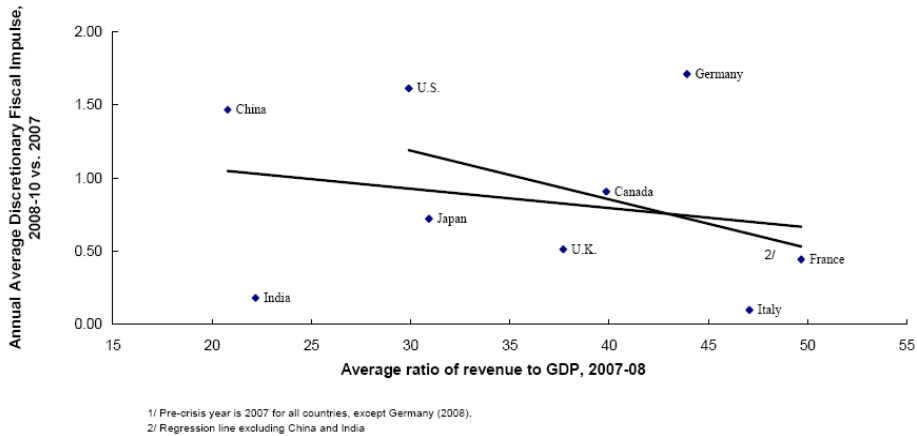
3) Fiscal year basis.

4) Includes only on-budget measures. Additional off-budget measures amount to 0.8 percent of GDP in 2008/09 and 1.6 percent of GDP in 2009/10 (including 0.4 percent of GDP for bank recapitalization).

5) Based on staff preliminary analysis, financial sector-related measures of 0.1 percent of GDP in 2008, 0.5 percent of GDP in 2009, and 0.2 percent of GDP in 2010 are excluded. These measures cover both subsidies to and capital injections in public financial institu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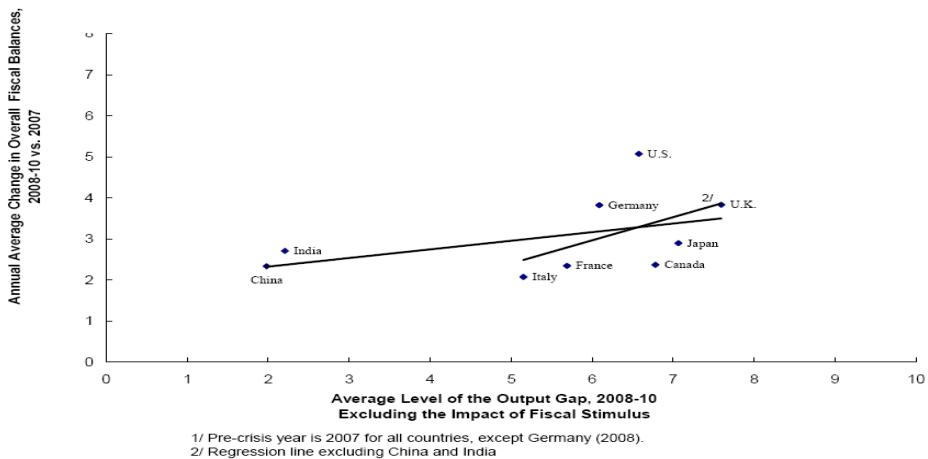
이 중에서 자동안정화 기능의 크기, 재정적 지원이 없을 경우 각 국가가 겪게 되는 생산차(output gap)의 크기, 정부부채 등과 경기부양책의 크기의 관계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자동안정화 기능의 크기에 대한 대리변수로 정부규모를 사용하여 경기부양책의 크기와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자동안정화 기능의 크기를 나타내는 대리변수인 정부규모와 경기부양책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과 인도를 제외할 경우 기울기의 절대값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정부규모와 경기부양책의 크기



자료: The Size of the Fiscal Expansion: An Analysis for the Largest Countries, IMF, February, 2009.

〈그림 3〉 생산차와 경기부양책의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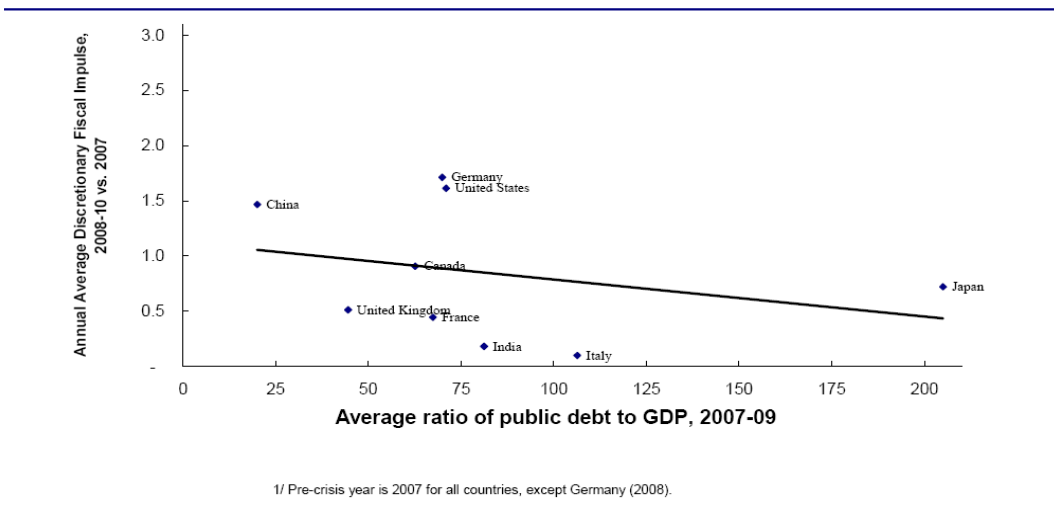


자료: The Size of the Fiscal Expansion: An Analysis for the Largest Countries, IMF, February, 2009.

재정적 지원이 없을 경우 각 국가가 겪게 되는 생산차(output gap)의 크기와 경기부양책의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재정적 지원이 없을 경우의 생산차가 큰 국가일수록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국과 인도를 제외할 경우, 생산차가 커질수록 재정정책이 커지는 정도가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경우에 비하여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부채의 규모와 경기부양책의 크기를 그림으로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가 커질수록 경기부양책의 규모는 줄어들게 된다. 이것은 정부부채의 증가로 정부의 재정여력이 감소하게 되면 경기부양책의 규모도 따라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림 4〉 정부부채와 경기부양책의 크기



자료: The Size of the Fiscal Expansion: An Analysis for the Largest Countries, IMF, February, 2009.

3. 경제위기 전후 재정책 연구 동향

1) 재정책의 주요 연구 분야

재정책(Public Finance)은 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주로 정부의 재정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정부와 관련된 재정활동 중 내부적 관리보다는 재정을 동원하고 지출하는데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재정책은 때때로 공공경제학(Public Economics)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양자의 관심사는 거의 일치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재정책이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분의 재무관리에 해당되는 용어인 재무(finance)라는 이름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정책이라

는 용어보다는 공공경제학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기도 한다(Rosen and Gayer, 2009).³⁾

재정학의 연구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경제학의 지평이 넓어지면서 그 전에는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분야까지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재정학도 매우 다양한 영역에까지 관심을 넓혀가고 있다. 따라서 재정학의 연구동향을 파악하려면 먼저 재정학 연구 분야를 확정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재정학 또는 공공경제학으로 이름이 붙여진 교과서들을 기초로 하여 연구 분야를 분류하여 보고자 한다.

재정학(Public Finance) 또는 공공경제학(Public Economics)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과서의 수는 많다. 이들 모두를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Rosen and Gayer(2009)를 중심으로 하고 다른 교과서들을 참고로 하여 연구 분야를 분류하고자 한다.

이들 교과서들의 내용 또한 매우 다양하나, 크게 네 개의 큰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정학 서설, 지출 관련 연구들, 수입 관련 분야, 중앙과 지방의 재정적 관계 등이 큰 네 부분에 해당된다. 먼저, 거의 모든 재정학 또는 공공경제학 교과서는 국가의 재정과 관련된 서론으로 출발한다. 여기에는 국가 재정의 전체적 규모나 구성 등 재정에 대한 개관과 재정학 연구를 위한 도구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또한 공공재, 외부효과 등 시장실패 개념과 비용편익 분석도 다루고 있다. 과거의 재정학 연구는 당위론적(normative)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었으나, 근래에는 실증론적(positive) 관점도 매우 중요한 접근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재정학 교과서는 실증론적 연구방법론에 해당되는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 또는 공공선택론(Public Choice)에 대한 설명을 독립된 장으로 구성하고 있다.

재정학 교과서의 두 번째 분야는 정부의 지출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지출 분야별로 각각의 장을 이루고 있다. 정부의 지출 분야는 매우 다양한데, 흔히 다루어지는 것은 교육, 의료(보건), 사회보장, 소득재분배 등이다. 이외에도 교과서에 따라서는 국방이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출도 다루고 있다.

세 번째 분야는 정부의 재정동원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정부의 수입은 크게 조세, 국채, 사용료 및 수수료, 민자 유치, 기타 재정수입 활동 등에서 발생한다. 특히 조세 분야는 다시 서론에 해당되는 분야와 세목별 장들로 구성된다. 조세 서론에는 조세와 관련된 개념과 분석방법, 최적 조세, 그리고 조세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 등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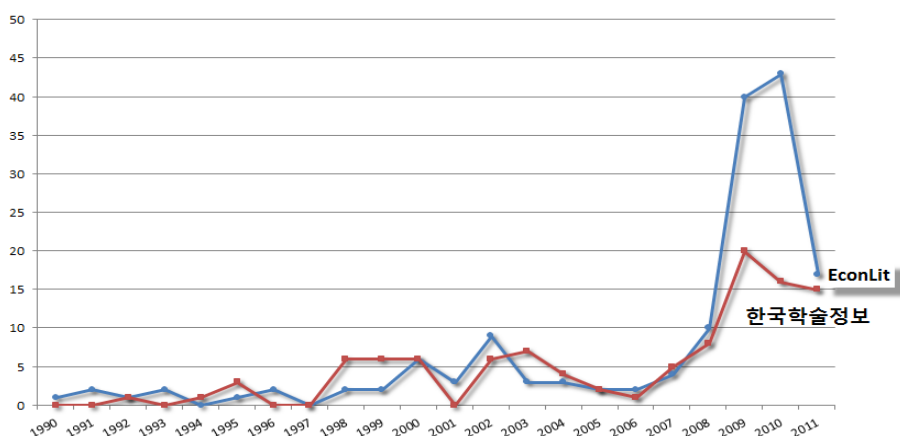
재정학의 네 번째 연구 분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적 관계와 관련된 것이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정부는 몇 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 사이에는 여러 종류의 재정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해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 정부 사이의 재정적 관계와 관련된 이론적·실증적 연구가 이 분야의 주요 내용이다.

3) 지금부터는 재정학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기로 한다.

2) 경제위기 전후 재정학 연구경향

2007년에 시작된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이상에서 살펴본 재정학 분야별로 연구동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전체적 변화에 대해 개관하여 보고자 한다. 아래 그림은 1990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경제학회가 발간하는 데이터 베이스인 EconLit과 한국학술정보에서 경제위기와 재정정책을 검색어로 하여 검색한 논문 편수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EconLit에서는 ‘Economic Crisis and Fiscal Policy’라는 검색어를 사용하였고, 한국학술정보에서는 ‘경제위기와 재정정책’으로 검색하였다.

〈그림 5〉 경제위기와 재정정책에 대한 연구 편수의 연도별 추이



위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EconLit의 경우 관련된 연구의 편수가 매우 저조하다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약간 증가하였고 그 이후로 2006년까지는 소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경제위기가 시작된 2007년부터 연구 편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09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한편, 한국학술정보에서 검색된 연구편수는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 이후로 증가하여 2001년을 제외한 2004년까지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후로 줄어 들었던 연구수는 2007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EconLit과 한국학술정보에서 경제위기와 재정정책이라는 주제로 검색된 논문의 편수는 경제위기와 거의 같은 시기에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07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는 이러한 주제의 연구를 대폭으로 증가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수의 증가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해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두 종류의 데이터 베이스에서 검색된 연구는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뿐만 아니라 심포지움이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 연구 중인 논문들도 검색 결과로 표시된다.

〈표 3〉 2006년 이후 재정학 연구 동향(2006~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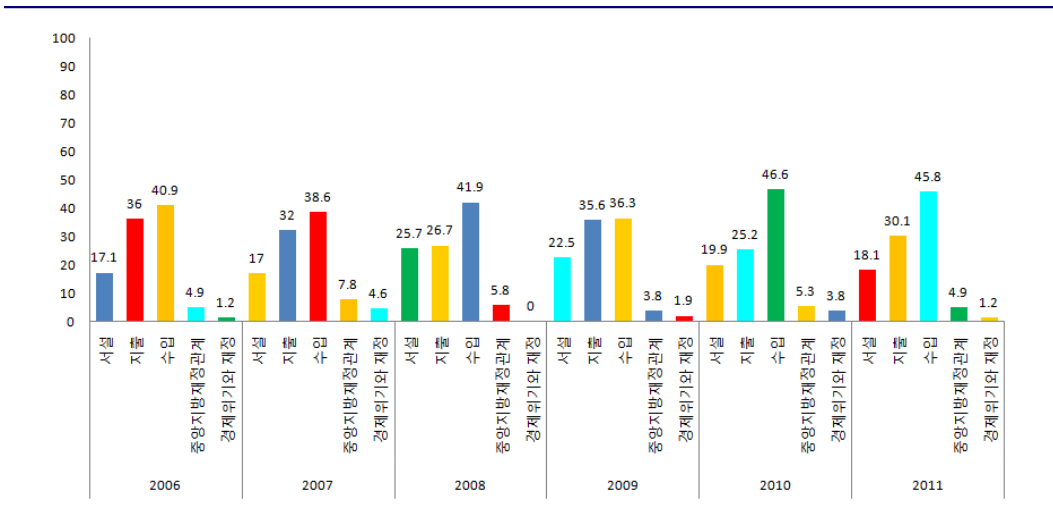
| 연도 | 세부분야 | International J. of Tax and Public Finance | J. of Public Economics | National Tax J. | 한국재정 학회지 | 합계 |
|------|---------------|--|---------------------------|--------------------|-------------|----------|
| 2006 | 서설 | 2(6.9) | 11(17.7) | 2(7.4) | 13(28.3) | 28(17.1) |
| | 지출 | 16(55.2) | 25(40.3) | 4(14.8) | 14(30.4) | 59(36) |
| | 수입 | 9(31) | 24(38.7) | 18(66.7) | 16(34.8) | 67(40.9) |
| | 중앙과지방의 재정적 관계 | 2(6.9) | 2(3.2) | 2(7.4) | 2(4.3) | 8(4.9) |
| | 경제위기와 재정 | 0(0) | 0(0) | 1(3.7) | 1(2.2) | 2(1.2) |
| | 소계(%) | 29(100) | 62(100) | 27(100) | 46(100) | 164(100) |
| 2007 | 서설 | 7(20) | 7(14) | 4(15.4) | 8(19) | 26(17) |
| | 지출 | 6(17.1) | 22(44) | 7(26.9) | 14(33.3) | 49(32) |
| | 수입 | 20(57.1) | 15(30) | 11(42.3) | 13(31) | 59(38.6) |
| | 중앙과지방의 재정적 관계 | 1(2.9) | 5(10) | 3(11.5) | 3(7.1) | 12(7.8) |
| | 경제위기와 재정 | 1(2.9) | 1(2) | 1(3.8) | 4(9.5) | 7(4.6) |
| | 소계(%) | 35(100) | 50(100) | 26(100) | 42(100) | 153(100) |
| 2008 | 서설 | 4(12.5) | 16(25.8) | 5(17.2) | 24(35.3) | 49(25.7) |
| | 지출 | 11(34.4) | 18(29) | 2(6.9) | 20(29.4) | 51(26.7) |
| | 수입 | 15(46.9) | 23(37.1) | 20(69) | 22(32.4) | 80(41.9) |
| | 중앙과지방의 재정적 관계 | 2(6.3) | 5(8.1) | 2(6.9) | 2(2.9) | 11(5.8) |
| | 경제위기와 재정 | 0(0) | 0(0) | 0(0) | 0(0) | 0(0) |
| | 소계(%) | 32(100) | 62(100) | 29(100) | 68(100) | 191(100) |
| 2009 | 서설 | 4(11.4) | 14(27.5) | 0(0) | 18(34) | 36(22.5) |
| | 지출 | 12(34.3) | 20(39.2) | 8(38.1) | 17(32.1) | 57(35.6) |
| | 수입 | 17(48.6) | 14(27.5) | 13(61.9) | 14(26.4) | 58(36.3) |
| | 중앙과지방의 재정적 관계 | 2(5.7) | 3(5.9) | 0(0) | 1(1.9) | 6(3.8) |
| | 경제위기와 재정 | 0(0) | 0(0) | 0(0) | 3(5.7) | 3(1.9) |
| | 소계(%) | 35(100) | 51(100) | 21(100) | 53(100) | 160(100) |
| 2010 | 서설 | 6(17.1) | 11(28.2) | 6(18.8) | 2(8) | 25(19.9) |
| | 지출 | 5(14.3) | 15(38.5) | 6(18.8) | 7(28) | 33(25.2) |
| | 수입 | 22(62.9) | 10(25.6) | 17(53.1) | 12(48) | 61(46.6) |
| | 중앙과지방의 재정적 관계 | 2(5.7) | 2(5.1) | 2(6.3) | 1(4) | 7(5.3) |
| | 경제위기와 재정 | 0(0) | 1(2.6) | 1(3.1) | 3(12) | 5(3.8) |
| | 소계(%) | 35(100) | 39(100) | 32(100) | 25(100) | 131(100) |
| 2011 | 서설 | 5(21.7) | 5(31.3) | 3(10.7) | 2(12.5) | 15(18.1) |
| | 지출 | 5(21.7) | 5(31.3) | 9(32.1) | 6(37.5) | 25(30.1) |
| | 수입 | 11(47.8) | 6(37.5) | 13(46.4) | 8(50) | 38(45.8) |
| | 중앙과지방의 재정적 관계 | 1(4.3) | 0(0) | 3(10.7) | 0(0) | 4(4.9) |
| | 경제위기와 재정 | 1(4.3) | 0(0) | 0(0) | 0(0) | 1(1.2) |
| | 소계(%) | 23(100) | 16(100) | 28(100) | 16(100) | 83(100) |

주: ()안은 %임.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정학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술지라 할 수 있는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National Tax Journal 등의 해외 학술지와 한국 재정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로 한정하여 2007년 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를 전후한 재정학 연구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앞 소절에서 살펴본 재정학의 세부 연구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 편수를 요약하여 보면 다음 표와 같다.⁴⁾

앞에서 살펴본 네 분야 이외에도 경제위기와 재정정책을 직접적으로 다룬 논문의 편수도 계산하여 보았다.

〈그림 6〉 분야별 연구 동향(합계)



이상에서 본 것처럼, 2007년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재정학 분야의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의 분야별 비중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들 모두를 합한 수를 토대로 한 비중을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은 더 큰 설득력을 가진다. 또한, 경제위기와 재정정책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의 수도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특별한 증가나 감소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베이스에서 관련 연구편수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학술지에서는 경제위기와 재정을 다룬 연구가 많지 않다는 것은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학술지보다는 주로 심포지움, 학술대회, 진행 중인 논문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을 목격하게 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첫째, 학술지에 게재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구가 시작되어 학술지에 발표되기까지는 보통 몇 년의 시간이 걸린다. 진행 중인 연구가 많다는 것

4) 2007년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도는 2006년에서 2011년으로 제한하였다.

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둘째, 경제위기의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기에 시간이 짧아 좀 더 충실한 연구를 위하여 자료가 축적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최근의 경제위기는 2007년 후반에 시작되어 2008년에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므로 아직 연도별 자료가 충분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셋째, 경제위기와 관련된 재정정책이 학문적인 관심사가 되지는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경제위기는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며, 그 때마다 재정 정책에 대한 논의는 여러 번 이루어졌다. 최근의 경제위기가 영향의 범위가 넓고 심각성이 크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책적 관심사는 필자연정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는 못한다는 견해이다.

4. 경제위기와 관련된 주요 재정정책 연구들⁵⁾

앞 절에서 재정학과 관련된 주요 학술지에 최근의 경제위기를 다룬 연구가 많지 않다는 것을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의 경제위기와 관련된 연구가 다른 학술지나 학술대회에 발표되거나 진행 중인 연구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을 분류하고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국가별 경제위기 현황 및 대응책

최근의 경제위기와 관련된 연구 중 가장 많은 편수를 차지하는 것은 국가별 경제위기의 크기와 대응정책을 논의한 연구들이다. 거의 모든 나라에 대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Shachmurove(2010)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포함한 미국의 경제위기를 1800년대부터 역사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과거의 경제위기와 최근의 경제위기를 비교함으로써 경제위기 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시도하고 있다. 한편, Fernandez-Arias 외(2011)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위기를 다루고 있다. 아일랜드의 사례는 Bergin 외(2011)와 Kinsella(2011)의 연구대상 이다.

또한, EU를 다룬 연구들은 다수 존재하는데 Belke(2009a), Brasoveanu 외(2011), Mateus (2009)등이 대표적이다. Staehr(2010)는 중유럽 국가들과 동유럽 국가들의 최근 경제위기를 기술 하고 있다. Aleksashenko(2009), Institute of Contemporary Development(2009) 등은 러시아를 다루고 있고, 노르딕 국가들에 대한 연구로는 Gylfason 외(2010)가 있다. 한편, Socol 외(2011) 는 루마니아의 사례를 고찰하였다.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연구도 활발한 편이다. Jitsuchon(2010)은 태국의 경제위기를 다루었고, Green(2010)은 동남아시아에 속하는 여러 국가들의 경제위기를 기술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사례 는 Sng 외(2010)에서 논의되었고, 타지키스탄은 Brownbridge 외(2009)의 주요 관심 대상국이다.

5) 여기에서 경제위기는 2007년 이후의 위기를 일컫는다.

이외에도 Abdih 외(2010)는 중동과 중앙아시아에 속하는 여러 국가들의 경제위기를 기술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경제위기를 다룬 연구로는 Basri 외(2010), Hill(2007) 등이 있으며, 슬로베니아에 대한 기술로는 Neck 외(2011)가 있다. Yaqub(2011)은 파키스탄의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가나를 다룬 연구로는 Antwi-Asare(2010)가 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국가별 경제위기를 다룬 연구는 매우 다양하며, 거의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술지나 진행중인 연구(working paper)가 아니라 대부분 보고서의 형태를 띠고 있다.

2) 경제위기의 효과

경제위기가 초래하는 효과에 대한 연구도 주목할 만한 것이 많이 있다. 경제위기는 생산량의 감소 이외에도 재정적자 심화, 실업 증가, 소득불평등 악화 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경제위기가 초래하는 재정적자에 대한 연구로는 Furceri 외(2010)가 가장 주목할 만하다. 그는 154개국을 대상으로 1980년부터 2006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금융위기는 재정적자와 장기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최근의 금융위기와 같은 심각한 위기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장기적으로 37% 포인트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가 시작되기 전에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높고 해외부채의 비율이 높았던 국가들의 재정적자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재정의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라는 관점에서 경제위기의 과급효과를 다룬 연구도 있다. Stubelj 외(2010)는 기존연구들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GDP 대비 정부부채(public debt-to-GDP)와 GDP 대비 예산수지 혹은 균형예산(budget balance-to-GDP)비율만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부채의 적정 수준과 성장률을 구하기 위하여 정부부채 이자율과 경제성장(interest rate on public debt and economic growth)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2000년부터 2010년까지 EU 27개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에 비하여 2009년과 2010년에 재정적자는 급상승하였는데, 이는 경기부양대책과 낮은 재정수입 때문인 것임을 밝혔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재정적자는 줄어들어야 하지만 2009년과 2010년을 살펴보면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Noord(2011)는 최근 유럽 국가들의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적인 비용을 추산한 뒤 그것이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는 역사적으로 재정위기의 여파로 경제성장이 낮아지고, 이것은 또 재정을 악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이 연구는 재정 강화와 동시에 경제성장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구조적 재편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은행부 구제를 위한 재정비용은 GDP 대비 13%정도로 추정되었고, 경제침체에 따른 EU 국가재정비용은 2007년 GDP의 1%에서 2010년 GDP의 7%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국가 채무는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주장한다.

경제위기가 초래하는 또 하나의 악영향은 실업의 증가이다. Furceri 외(2009)는 자기회귀시차 분포모형(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s model)을 이용하여 구조적 실업에 있어 경제위기의 영향을 분석하고 제도적 설정의 역할을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1970~2008 사이의 OECD 30개국에 대한 패널데이터 분석을 통해 경기침체는 평균적으로 구조적실업률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심각한 경제위기가 있으면 그 5년 후 구조적실업률은 거의 1.5%가량 높아졌고,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경제위기의 경우 0.6% 가량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호법과 같은 제도는 초기충격의 크기와 경기침체 이후의 적응패턴 모두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이외에도 Reinhard 외(2009)는 경제위기가 생산량 감소와 고용감소를 초래한다는 분석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제위기는 생산량 감소와 재정적자 심화, 실업 증가를 초래한다는 데 거의 모든 연구가 일치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

3) 경제위기 대책

경제위기에 대한 대책과 관련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부류로 구분될 수 있다. 경기회복을 위한 대응책, 경제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한 연구,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응책 등이다.

먼저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을 다룬 최근의 연구로는 Brasoveanu 외(2011)가 있다. 그들은 경기회복을 위하여 재정지출 확대, GDP 대비 재정수입 확대(탈세방지, 지하경제 축소, 평균 이상 수입자에 대한 세율인상, EU 자금 확충),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에 대한 지출 확대(인프라, 교육, 보건, 연구개발, 사회복지, 환경보호)를 권고하고 있다. Sen은 합리적이대 모형에 기반을 둔 각종 정책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엄격한 재정 통제 또는 ‘최후의 고용주(employer of last resort)’ 정책과 같은 경기부양책으로 더 적극적인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EU를 연구한 Belke(2009b)는 위기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개별 독립국가의 재정정책이 유럽통화연맹(EMU)에 의한 협력에 의한 방법보다 더 좋지만 평상시 재정정책 협력(fiscal policy coordination)은 잘못 인식되고 있는 듯 하다고 주장한다. 현재와 같은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외부효과가 유럽지역 국가들에게 유의미한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국가 재정정책의 협력된 노력에 의해 내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국가간 협력을 통한 재정정책은 유동성 함정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Abdih 외(2010)는 중동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재정정책이 경기순행적(pro-cyclical)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으로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미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Baker(2009), Arnold 외(2010), McNeil(2010) 등이 있다. Baker(2009)는 경기부양책으로 피고용자 의료지출에 대한 고용자 세액공제를 주장하고 있다.

Arnold 외(2010)는 조세를 통한 경기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소비세와 이동이 불가능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로 조세구조를 이동하는 것이 경기회복에 바람직하다고 한다. 이에 반해, 법인세 감세와 최고소득세율 구간의 감세는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소비세와 재산세의 감세는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준다고 보았으며, 가장 큰 경기회복 효과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소득세 감면은 경기회복 뿐만 아니라 소득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보았으며, 소비세와 재산세 증가로 인한 세수증가는 경기회복 이후에도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조세를 통한 경제위기 재발방지는 이미 Keynes(1936)가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에 대해 이야기 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최근 이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로는 Hemmelgarn 외(2010), Keen(2011) 등을 들 수 있다.

Hemmelgarn 외(2010)에 따르면, 조세보다는 금융정책과 차입자들의 위험감수(risk-taking)가 경제위기를 초래한 더 큰 원인이다. 그러나 이들은 조세 특히 CEO 보수에 대한 조세규정이나 투자 유형에 대한 tax arbitrage 가능성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경기회복을 위한 경기부양책(stimulus package)의 일환으로 조세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나 조세제도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많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거래세의 도입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이러한 조세가 변동성(volatility)을 감소시키고 세수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론적 실증적 연구결과는 혼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조세가 volatility를 오히려 증가시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보다 더 나은 대안은 부채에 대해 우대함으로써 레버리지를 과대하게 만드는 조세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자금조달(financing) 대안들이 좀 더 중립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비해, Keen(2011)은 경제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금융부문에 대한 교정과세(corrective taxation)와 규제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는 2008년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많은 국가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대한 세제개편에 대해 제고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불확실성 하에서 은행권에 대한 과세와 규제의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규제가 없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세제도가 유용한 조절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교정과세의 잠재적인 역할에 중점을 두고 금융기관에 대한 차별적인 조세수단의 설계(design)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한편, 약간 다른 시각에서 경제위기의 재발방지에 접근한 연구들도 있다. Dolls 외(2009)는 미국과 EU를 비교하여 자동안전장치로서의 세금과 조세이전체계(tax and transfer systems)의 효율성 분석을 시도하였다.⁶⁾ 그들에 따르면, 자동안전장치가 비례소득충격(Proportional income

6) 이를 위하여 TAXSIM(the NBER's microsimulation model for calculating liabilities under US Federal and State income tax laws from individual data)과 EUROMOD(a static tax-benefit model for 19 EU countries, which was designed for comparative analysis)를 이용하였다.

shock)의 경우 EU에서는 38%, 미국에서는 32%를 흡수하였다. 실업충격(Unemployment shock)의 경우 EU에서는 48%, 미국에서는 34%를 흡수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가처분소득의 완충작용은 EU에서 23~32%, 미국에서 19%의 수요 안정화(demand stabilization)를 이끌어 냈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동·남 유럽의 경우가 중앙·북유럽의 경우보다 더 낮은 완충작용을 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자동안정장치가 약한 나라 중 어떤 국가가 재정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지 조사하였으나 이를 지지하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고 한다.

4) 재정건전화

경제위기와 관련된 재정정책 중 마지막으로 학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재정건전화이다.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국가들이 감세와 부채를 통한 재정지출 확대라는 정책조합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 이와 같은 정책은 필연적으로 재정적자와 부채의 확대로 이어지는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매우 크다. 이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로 주목을 끄는 것은 Devereux(2010)이다. 그에 따르면, 경제위기시에는 유동성 함정이 존재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부채를 통한 재정지출 확대는 훨씬 더 큰 재정지출 확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보다는 감세를 통한 경기회복 정책이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5. 맺음말

2007년에 시작되어 2008년에 본격화된 경제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 이래로 가장 크고 광범위한 경제위기로 기록된다. 경제위기가 대두될 때마다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정책이 화두로 떠오른다. 본고에서는 최근의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재정학 분야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으며, 주목할 만한 연구로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두 종류의 국내외 데이터 베이스를 검색하였고, 다섯 종류의 학술지 논문들을 조사하였다.

무엇보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경제위기와 재정정책을 다룬 연구 편수는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마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정책이 학문적 관심이라기보다는 실질적 정책문제에 더 가깝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학술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재정학의 세부분야별 연구동향을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가 재정적자 및 실업에 미치는 영향,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정책,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정책 등은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수는 많지 않은 편이며, 엄격한 분석을 토대로 한 연구는 더더욱 흔치 않다.

■ 참고문헌

- 김상현 (2009), “경제위기와 재정정책,” 『ITBI Review』, 제15권 제1호, 국제무역경영연구원.
- 김종희 (2010), “최근 유럽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에 대한 실증분석,” 『재정학연구』.
- 박종규 (20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정책의 방향,”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 백웅기 (2009),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금융정책의 효과와 출구전략,”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 백웅기·서은숙 (2010),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한 재정정책의 유효성 분석,” 『재정학연구』.
- 최 광 (2009), “경제위기와 재정정책,”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 최 광·이성규 (2010),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 재정준칙,” 『재정학연구』.
- Abdih, Yasser · Lopez Murphy · Pablo · Roitman · Agustin · Sahay · Ratna (2010), “The Cyclicity of Fiscal Policy in the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Is the Current Crisis Different?,”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Working Papers*, 26, 10–68.
- Agell, J., Lindh, T., Ohlsson, H. (1997), “Growth and the Public Sector: A Critical Review.”
- Aleksashenko, S. (2009), “The Collapse Is Over, the Crisis Continues,” *Problems of Economic Transition*, 52, 3–24.
- Antwi-Asare, Theodore; Cooke, Edgar A.; Twerefou, Daniel K.; Cockburn, John; Fofana, Ismael; Tiberti, Luca (2010), “Simulating the Impact of the Global Economic Crisis and Policy Responses on Children in Ghana,” *PEP-MPIA, Cahiers de recherche MPIA*.
- Arnold, Jens Matthias, Brys, Bert, Heady, Christopher, Johansson, Asa, Schwellnus, Cyrille, Vartia, Laura (2010), “Tax Policy for Economic Recovery and Growth,” *The Economic Journal*, 121, February, F59–F80.
- Auerbach, A. (2009), “Implementing the New Fiscal Activism,”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 Proceedings*, 99(2), 543–49.
- Baker, Dean (2009), “The Housing Crash Recession and the Case for a Third Stimulus,”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CEPR)*.
- Basri, Muhammad Chatib; Rahardja, Sjamsu, “The Indonesian Economy amidst the Global Crisis: Good Policy and Good Luck,” *ASEAN Economic Bulletin*, v. 27, 77–97.
- Belke, Ansgar (2009a), “Preventing Recession in Europe: National vs. European Approaches: Fiscal Stimulus Packages, Uncertainty and Economic Crisis: Is the Option of Waiting Valuable?,” *Intereconomics/Review of European Economic Policy*, v. 44, 1, 15–22.
- Belke, Ansgar (2009b), “Fiscal Stimulus Packages and Uncertainty in Times of Crisis: Economic Policy for Open Economies,” *Economic Analysis and Policy*, v. 39, 25–46.
- Benczes, Istvan, “Fiscal Stimulus and Its Effects in the European Union,” *Intereconomics/Review of European Economic Policy*, v. 44, 317–24.
- Bergin, Adele; Fitz Gerald, John; Kearney, Ide; O'Sullivan, Cormac (2011), “The Irish Fiscal Crisis,” *National Institute Economic Review*, 47–59.
- Arnold, Jens Matthias, Brys, Bert, Heady, Christopher, Johansson, Asa, Schwellnus, Cyrille, Vartia, Laura (2010), “Tax Policy for Economic Recovery and Growth,” *The Economic Journal*, 59–80.
- Auerbach, A. (2009), “Implementing the New Fiscal Activism,”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

- Proceedings, 543–49.
- Baker, Dean (2009), “The Housing Crash Recession and the Case for a Third Stimulus,”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CEPR)*.
- Basri, Muhammad Chatib; Rahardja, Sjamsu, “The Indonesian Economy amidst the Global Crisis: Good Policy and Good Luck,” *ASEAN Economic Bulletin*, v. 27, 77–97.
- Belke, Ansgar (2009a), “Preventing Recession in Europe: National vs. European Approaches: Fiscal Stimulus Packages, Uncertainty and Economic Crisis: Is the Option of Waiting valuable?,” *Intereconomics/Review of European Economic Policy*, v. 44, 15–22.
- Belke, Ansgar (2009b), “Fiscal Stimulus Packages and Uncertainty in Times of Crisis: Economic Policy for Open Economies,” *Economic Analysis and Policy*, v. 39, 25–46.
- Benczes, Istvan, “Fiscal Stimulus and Its Effects in the European Union,” *Intereconomics/Review of European Economic Policy*, v. 44, 317–24.
- Bergin, Adele; Fitz Gerald, John; Kearney, Ide; O’Sullivan, Cormac, “The Irish Fiscal Crisis,” *National Institute Economic Review*, 47–59.
- Blochliker, Hansjorg; Charbit, Claire; Campos, Jose Maria Pinero; Vammalle, Camila (2010), “Sub-central Governments and the Economic Crisis: Impact and Policy Responses,” *OECD, Economics Department,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752.
- Brasoveanu, Iulian Viorel; Brasoveanu, Laura Obreja, “Effects of the Current Economic Crisis on the Fiscal Variables in EU Countries,” *Theoretical and Applied Economics*, v. 18, 127–38.
- Brownbridge, Martin; Canagarajah, Sudharshan (2009), “How should fiscal policy respond to the economic crisis in the low incom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some pointers from Tajikistan,” *Th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Series*, 4970.
- Devereux, Michael B. (2010), “Fiscal deficits, debt, and monetary policy in a liquidity trap,” *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 Globalization and Monetary Policy Institute Working Paper*, 44.
- Dolenc, Primož; Stubelj, Igor (2010), “Fiscal Sustainability in EU and Current Financial/Economic Crisis,” *International Journal of Sustainable Economy*, v. 2, 80–91.
- Dolls, Mathias; Fuest, Clemens; Peichl, Andreas (2009), “Automatic Stabilizers and Economic Crisis: US vs. Europe,” *CESifo Group Munich, CESifo Working Paper Series: CESifo Working Paper No. 2878*.
- Feldstein, M. (2009), “Rethinking the Role of Fiscal Policy,”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 Proceedings*, 556–59.
- Fernandez-Arias, Eduardo; Montiel, Peter, The Great Recession, “‘Rainy Day’ Funds, and Counter-cyclical Fiscal Policy in Latin America,” *Contemporary Economic Policy*, v. 29, 304–322.
- Furceri, Davide, Mourougane, Annabelle (2009), “How do Institutions Affect Structural Unemployment in Times of Crises?,” *OECD Working Paper*.
- Furceri, Davide, Zdzienicka, Aleksandra (2010), “The Consequences of Banking Crises for Public Debt,” *Working Paper, GATE Groupe d’Analyse et de Theorie Economique Lyon–St Etienne*.
- Green, David Jay, “Southeast Asia’s Policy Response to the Global Economic Crisis,” *ASEAN Economic Bulletin*, v. 27, 5–26.
- Gylfason, Thorvaldur; Holmstrom, Bengt; Korkman, Sixten; Soderstrom, Hans Tson; Vihriala, Vesa (2010), “Nordics in Global Crisis: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264, Helsinki: Taloustieto Oy.

- Hal, "The Indonesian Economy: Growth, Crisis and Recovery," *Singapore Economic Review*, v. 52, 139–66.
- Hemmelgam, Thomas; Nicodeme, Gaetan J. A. (2010), "The 2008 Financial Crisis and Taxation Policy," *CESifo Group Munich, CESifo Working Paper Series: CESifo Working Paper No. 2932*.
- Hemmelgam, Thomas; Nicodeme, Gaetan; Zangari, Ernesto (2011), "The Role of Housing Tax Provisions in the 2008 Financial Crisis," *Directorate General Taxation and Customs Union, European Commission, Taxation Papers*, 27.
- Institute of Contemporary Development, "The Economic Crisis in Russia: An Expert View, Problems of Economic Transition," v. 52, 14–41.
- Jitsuchon, Somchai, "Fiscal Policy Issues in Thailand after the Current Economic Crisis," *Public Policy Review*, v. 6. 741–767
- Keen, Michael (2011), "Rethinking the Taxation of the Financial Sector," *CESifo Economic Studies*, Vol. 57, 1–24.
- Kinsella, Stephen (2011), "Is Ireland really the role model for austerity? Geary Institute, University College Dublin," Working Papers: 201122.
- Mateus, Abel M., "The Current Financial Crisis and State Aid in the EU," *European Competition Journal*, v. 5, 1–18.
- McNeil, Todd W. (2010), "Recovery Act of 2009—Public Housing Capital Fund: Obligations and Number of Jobs by ZIP Code, Cityscape," *A Journal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v. 12, 145–147.
- Neck, Reinhard; Blueschke, Dmitri; Weyerstrass, Klaus, "Optimal Macroeconomic Policies in a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A Case Study for Slovenia," *Empirica*, v. 38, 435–459
- Noord, Paul van den (2011), "Turning the page? EU fiscal consolidation in the wake of the crisis," *Empirica*, v. 38, 19–51.
- O'Connell, Joan, "The 2007 Crisis and Counter-cyclical Policy," *Studies in Economics and Finance*, v. 27, 148–160
- Rinhart, C. M., Rogoff, K. S. (2008), "Is the 2007 US Subprime Crisis So Different? An International Historical Comparison,"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 Proceedings*, 98(2): 339–344.
- Rinhart, C. M., Rogoff, K. S. (2008), "The Aftermath of Financial Crisis,"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 Proceedings*, 99(2): 466–72.
- Rosen, Harvey S., Gayer, Ted (2009), *Public Finance*, 9th Edition, McGraw Hill.
- Shachmurove, Yochanan (2010), "Reoccurring Financial Crises in the United States," *PIER Working Paper 11–006*, Pen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Pennsylvania.
- Sng, Hui Ying; Chia, Wai Mun, eds. (2010), "Singapore and Asia: Impact of the Global Financial Tsunami and Other Economic Issues," pp. xviii, 203, Hackensack, N.J. and Singapore: World Scientific.
- Socol, Aura Gabriela; Mantescu, Dorin, "Re-modeling the Romanian Fiscal Policy under the Terms of the Economic Crisis," *Theoretical and Applied Economics*, v. 18, 111–120.
- Staehr, Karsten (2010),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Public Finances in the New EU Countries from Central and Eastern Europe," *Bank of Estonia Working Paper 2/2010*.
- Stubelj, Igor; Dolenc, Primož, "Fiscal Sustainability of EU Member States in the Context of Current Financial Crisis," *Ekonomika Istrazivanja/Economic Research*, v. 23, 37–62.

- Ucal, Meltem; Alici, Asli, "Is Fiscal Policy Sustainable in Turkey? Emerging Markets Finance and Trade," *Supplement 1* May-June 2010, v. 46, 89-93.
- Vernengo, Matias; Caldentey, Esteban Perez (2010), "All is Quiet in the Fiscal Front: Fiscal Policy for the Global Economic Crisis," University of Utah, Department of Economics, Working Paper Series,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Utah.
- Yao, Shujie, Zhang Jing (2011), "On Economic Theory and Recovery of the Financial Crisis," *The World Economy*: 764-777.
- Yaqub, Muhammad, "The Causes of Economic Crisis in Pakistan and Its Remedial Measures," *State Bank of Pakistan Research Bulletin*, v. 7, 7-29.